

# 민주 상임고문단, “이재명 체포동의안 압도적 다수로 부결”

###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李, 상임고문단 만나

### “뺨박은 지나가는 과정...민주화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권노갑, 이해찬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상임고문들은 “정권이 민주당을 흔들려는 것을 이겨내야만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등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향후 수사에 뚝뚝이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찬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지금은 비록 (당이) 지난 선거에서 저 여러 뺨박을 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할 수사는) 이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고 하는 게 더 (큰) 정치적 목적”이라며 “이 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줘 큰 잡음 없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만 민주화와 경제 발전, 남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고문은 “정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현실”이라며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채정 고문도 “(당이) 민주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싸움의 과정에 있다”며 “민주당

이 정부여당의 공격에 흔들려선 안 되고, 쉽게 무너질 정당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득 고문은 “(당내에) 반이재명이 어디 있나. 제가 보기에 (반명은) 민주당에 없다”며 “이 선배님들을 봐서라도 민주당이 단결을 통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노갑 고문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면서도 “다음번에는 뚝뚝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출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 상임고문님들은 역전의 용사들”이라며 “당이 나아가야 할 길, 현재 우리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많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박홍근 “양곡관리법, 與 의지 없으면 법 따라 처리”

### “흔들림 없이 민생 법안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마지막까지 검토하되, 끝내 여당 의지가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을 시사하고 “그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이 초과된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도 절차대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의료법 등은 이미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며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도록 법사위에 묶인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길 엄중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림축산식품 장관의 양곡관리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 건의 검토 언급 관련 비판 목소리도 냈다.

그는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에 눈 먼 주무장관이 농심을 핑개친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을 위한 법이지 대통령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농민들 생계는 당장 나라인데 장관은 독단에 빠진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바쁘다”며 “집권 여당은 야당 법안 수정을 위한 설득은커

녕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21대 상반기 국회는 법사위 폐단을 막으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했고, 이번 양곡관리법은 그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재환기자

## 與 “입법 폭거 민주당, 노란봉투법 멈춰라”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늦기 전에 노란봉투법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이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준이 되어가는 듯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하루 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해 놓고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이니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며 “국민 목소리인지 거대 노조 목소리인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느 공사장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조합원 고용률로 인해 철근팀장의 직함을 달았지만 도면도 보지 못하면서 월 7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등장한 거대노조의 갖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불모가 되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찬반 의견이 팽팽한 법안일수록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받고도 거대 노조는 회계 치외법권인 양 착각 속에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보다 거대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입법 강행은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노조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줄곧 국민에게 돌아갔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의 통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정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